

베트남 사회경제개발계획 조정의 의미와 한국-베트남 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

곽성일 세계지역연구2센터장 (sikwak@kiep.go.kr, 044-414-1050)



차 례

1. 사회경제개발계획 2026-2030의 수립 배경
2. 베트남 경제구조의 개편 방향: 제도, 기술, 인적 자원의 혁신
3. 한국-베트남 협력에 주는 시사점

주요 내용

- ▶ 베트남은 2026년 1월 개최된 제14차 전국대표대회(이하 제14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국가 발전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재편하는 '민족도약의 시대(Kỳ nguyên vươn mình của dân tộc)'로의 진입을 공식 선포
 - 제14차 당대회의 핵심 의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을 국가 성장의 새로운 핵심 동력으로 설정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경제로의 이행을 공식화
 - 2026년 1월 당대회에서 조정되고 4월 포럼 총비서가 최종 승인한 「사회경제발전계획(SEDPP) 2026-2030」은 양적 성장의 목표치(연평균 10% 성장)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질적 고도화(총요소생산성 기여도 55% 이상)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
- ▶ 베트남 정부는 총요소생산성(TFP) 기여도 확대(55% 이상)와 제도·기술·인적자원 혁신을 통해 10% 성장을 자신
 - 성장에서 TFP 기여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 기술 발전, 인적 자원 개발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베트남은 이들 분야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빠르게 추진 중임.
 - 행정 체계의 현대화 및 공무원의 복지부동 방지 메카니즘 도입, 핵심산업법(Law on Key Industry)을 통한 산업 생태계 자립화, 디지털 기술 산업법(DTI Law)과 인공지능(AI) 국가 전략 채택, 인적 자원 육성 및 반도체·AI 허브로의 도약, 지속가능한 성장과 녹색 전환 추진
- ▶ 제14차 당대회 이후 베트남이 지향하는 '새로운 시대'는, 한국이 베트남을 규정하는 방식을 단순한 '포스트 차이나'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의 가치를 재부여하게 함.
 - 베트남 성장이 한국의 기회가 되도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5년 양국 관계의 핵심 과제
 - [인적자원 개발 기반의 상호 호혜적 협력 베트남 로컬 기업과 한국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공진화(Co-evolution) 과정은 한국식 생산 표준을 확산시켜 양국 간 중간재와 자본재 무역 확대에 기여
 - 베트남 기술 인재의 전략적 활용 통해 한국의 첨단 기술 부문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
 - [에너지 안보 및 탄소 시장 협력 기회 포착] 베트남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PDP8)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스마트 그리드 확충계획은 한국의 ESS, 스마트 전력망 기술이 진출할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을 제공

1. 사회경제개발계획 2026-2030의 수립 배경

- 베트남은 2026년 1월 개최된 제14차 전국대표대회(이하 제14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국가 발전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재편하는 ‘민족도약의 시대(Kỷ nguyên vươn mình của dân tộc)’로의 진입을 공식 선포
- 이번 당대회는 1986년 도입된 도이머이(Đổi Mới) 정책 이후 베트남이 맞이한 가장 중대한 경제적 전환점으로 평가
- 단순한 정책적 수정을 넘어 국가 전반의 운영체제를 고도화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음.
 - 지난 40여 년간 베트남은 저임금 노동력과 자원 추출, FDI에 의존하던 조립 가공 중심의 외연적 성장을 지속
 - GVC의 파편화,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전환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국내적으로는 급격한 인구 구조의 고령화라는 삼중고에 직면하면서 기존의 성장 모델은 한계에 봉착
- 제14차 당대회의 핵심 의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을 국가 성장의 새로운 핵심 동력으로 설정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경제로의 이행을 공식화(표 1 참고)
 - 당대회에서 조정되고 2026년 4월 토람 총비서가 최종 승인한 ‘사회경제발전계획(SEDP) 2026-2030’은 양적 성장의 목표치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질적 고도화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

표 1. 베트남 제14차 당대회 및 SEDP 2026-2030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및 목표	전략적 의미 및 배경
지도부 구성	토람(To Lam) 총비서 재선출, 정치국 위원 19명 및 중앙위원 200명 선출	
국가 비전	2030년: 현대적 산업을 갖춘 중상위 소득국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	도이머이 이후 4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장기 도약
연평균 성장률	GDP 성장률 10% 이상 유지	초고속 성장을 통한 경제 규모의 비약적 확대
생산성 지표	총요소생산성(TFP) 기여도 55% 이상	투입 중심에서 효율성·혁신 중심으로 경제 체질 개선
디지털 경제 산업 구조	2030년까지 GDP의 30% 기여 제조업 및 가공업 비중 GDP의 28% 달성	전 산업의 디지털화 및 신산업 육성 단순조립에서 설계 및 첨단 제조로의 전환
전략적 돌파구	① 제도 개혁(규제 비용 절감) ② 인적 자원 개발 ③ 인프라(디지털·녹색·교통) 구축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3대 핵심축
신성장 동력	반도체, 인공지능(AI), 녹색·순환 경제, 과학기술 및 혁신 중심의 성장 모델	

자료: Government News, 14th National Party Congress adopts Resolution(2026. 1. 23.), <https://en.baochinhphu.vn/14th-national-party-congress-adopts-resolution-111260123185015024.htm>(검색일: 2026. 4. 8.).

■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적 지표는 총요소생산성(TFP)의 향상

- 총요소생산성(TFP) 증가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 증가 외에 기술 진보, 경영 혁신, 제도 개선 등에 의해 발생하는 생산 증대를 의미하며, 베트남 정부는 TFP 기여도를 55% 이상으로 설정

- 현재 베트남의 TFP 기여율은 2021~25년 기간에 약 47%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2016~20년 대비 상승 폭이 0.96%p에 불과하여 사실상 정체 상태(그림 1 참고)
- 향후 5년 내에 기여도를 8%p 이상 끌어올린다는 목표는 베트남 경제 전반에 걸친 ‘파괴적 혁신’이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

그림 1. 총요소생산성(TFP) 기여도 추이



자료: VietnamNSO Statistical Yearbook 2024, Table 110과 KOTRA 해외시장뉴스(2026. 3. 10.)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 베트남은 글로벌 가치사슬 경쟁, 국제무역 정책의 변동성, 국내 생산성과 관련된 구조적 한계 등 녹록지 않은 대외 환경에 노출

-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격화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예: 301조 조사 및 관세 부과 위협)는 베트남의 수출 중심 성장 모델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
-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미-이란 갈등 등)로 인한 에너지 가격 충격은 원유 소비의 66%를 해외에 의존하고, 원유 수입의 8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베트남의 에너지 수급 구조에 심각한 위협
- 이러한 대내외적 압력은 베트남이 왜 이 시점에 행정, 산업, 인프라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경제 구조 개편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를 설명

2. 베트남 경제구조 개편 방향: 제도, 기술, 인적 자원의 혁신

가. 행정 체계의 현대화 및 병목 현상 제거

■ 베트남 지도부는 비효율적인 행정 체계와 관료주의를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최대의 ‘병목’으로 규정하며, 제14차 당대회는 제도 개선을 통한 거버넌스의 현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채택

- 가장 가시적인 변화는 2025년부터 시행된 대대적인 행정 구역 개편
 - 행정 비용 절감과 광역 경제 권역을 형성하여 지역 간 물류 및 산업 연결성(connectivity)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2025년부터 63개의 성·시급 행정 단위를 34개로 통폐합하는 대대적인 행정 구역 개편을 단행

표 2. 2025 베트남 행정구역 통합 현황 및 전망

항목	개편 전	개편 후(2025년 7월 시행)	기대 효과 및 주요 내용
행정 단위 수	63개(57개 성, 6개 직할시)	34개(28개 성, 6개 직할시)	행정 효율화 및 중복 규제 제거
행정 계층	3단계 (광역-중간-기초)	2단계(광역-기초)	중간 단계(군·현) 폐지를 통해 의사결정 속도 향상
주요 통합 사례	개별 성·시 단위 운영	호찌민-빈증-바리아붕따우 통합 등	광역 경제권 형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인력 및 예산	방대한 관료 조직 유지	공무원 25만 명 감축, 예산 10조 원 절감	절감된 예산의 기술·인프라 재투자

자료: 한국무역협회(2025), 「베트남, 행정구역 통합 개편 진행, 63개에서 34개 성·시로 축소」, 해외시장뉴스 <https://www.kita.net/board/overseasMarketNews/overseasMarketNewsDetail.do?postIndex=1857075&boardType=0>(검색일: 2026. 4.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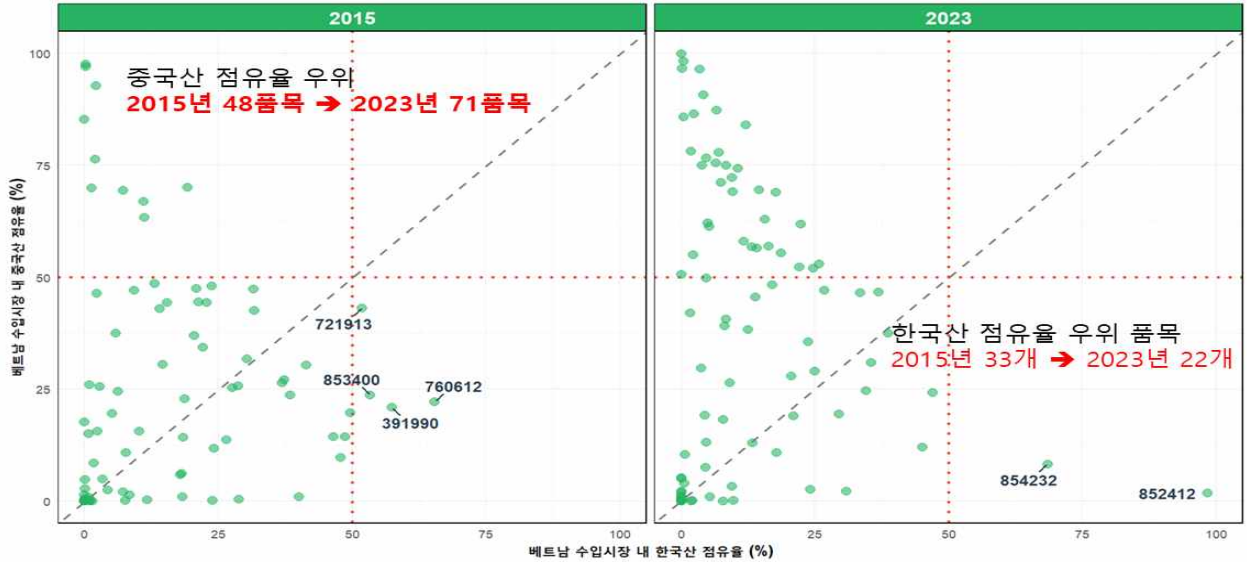
- 행정 개편은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것을 넘어,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
 - 각 성의 행정부는 지역 특색에 맞는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정책을 독립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
 - 홍강 삼각주는 베트남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서 경제 구조 조정 노력을 주도하며 혁신 주도형 성장 모델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있고, 북중부 핵심 경제특구(탄화-응에안-하띤) 지역은 석유 정제 및 석유화학, 금속, 기계 제조, 자동차 생산 및 관련 산업의 국가적 중심지로 자리매김¹⁾
- ‘시행령 73/2023/ND-CP’를 통해 부패 방지 캠페인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伏地不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일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메커니즘을 도입²⁾
 - 부패 방지 캠페인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들의 보신주의와 의사결정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적 이익의 추구 없이 절차를 준수한 과감한 결정에 대해서는 객관적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내용을 담음.
 - 정책 집행의 역동성을 회복하여 기업들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려는 정치적 의지의 표현

나. 핵심산업법(Law on Key Industry)을 통한 산업 생태계 자립화

- 베트남은 수출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구조적으로는 중국과 한국 등으로부터 부품과 원자재를 수입하여 조립하는 소위 ‘통로형 경제’의 한계를 보임.
- 베트남은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ies)이 발전되어 있지 않아서, 수출 강국임에도 정작 핵심 부품과 원자재는 중국과 한국 등에서 수입
 - 베트남 수입시장의 100대 수입품목 중 중국산 점유율 50% 초과 품목 수가 2015년 9개에서 2023년에는 35개 품목으로 급증
 - 베트남 수입시장에서 한국산보다 중국산이 점유율이 높은 품목 수도 2015년 48개에서 2023년 71개 품목으로 증가하면서 한국 제품의 점유율이 중국산에 비해 하락(그림 2 참고)

1) Vietnam Brief, <https://www.vietnam-briefing.com/news/tapping-into-vietnam-high-value-growth-ambition-in-2026.html/>.
 2) THƯ VIỆN PHÁP LUẬT, <https://thuvienphapluat.vn/van-ban/Bo-may-hanh-chinh/Nghi-dinh-73-2023-ND-CP-khuyen-khich-bao-ve-can-bo-dam-chiu-trach-nhiem-vi-loi-ich-chung-560734.aspx>.

그림 2. 베트남 전체 수입시장 100대 품목 수입 동향 분석



주: 1) 2023년 베트남 총수입액 기준 100대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지만 HS코드가 2017년 바뀌면서 2015년에서 포함되지 않은 신규 품목 7개가 제외되어 2023년 93개 품목이 식별됨.
2) 붉은 점선은 점유율 50%를 의미하며, 회색 대각선 점선은 한국산과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 내에서 점유율이 동일함을 의미.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활용하여 베트남 수입시장 내 점유율을 저자가 계산.

○ 수출에 있어 해외부가가치(FVA)의 활용 비중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기술제조업의 수출에 있어서 국내부가가치(DVA) 활용 비중이 아세안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음(그림 3, 4 참고).

그림 3. 수출에 있어서 FVA 활용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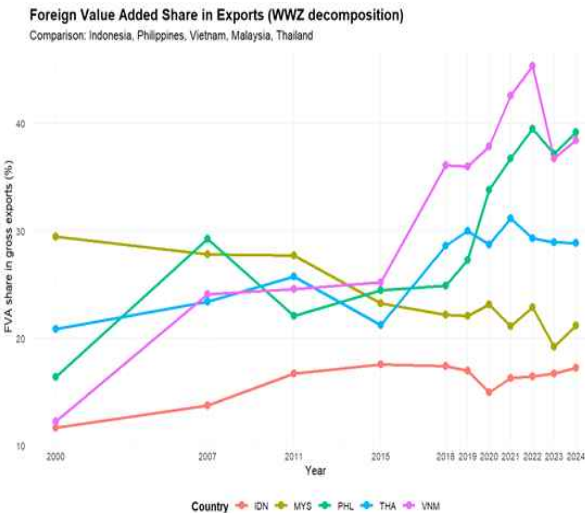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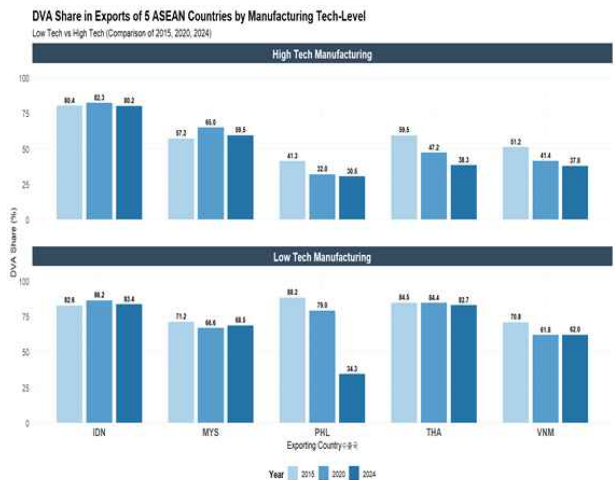


그림 4. 수출에 있어서 기술 수준별 DVA 활용 비중 추이



자료: ADB MRIO 각 연도 자료(2010년 실질가격)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 베트남 정부는 삼성, 애플(폭스콘) 등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지만, 베트남 현지 로컬 기업들이 이들의 공급망에 참여하지 못하고 단순 소모품 공급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

- 세계은행(2017)은 자국 SME(중소·중견기업)들이 대부분 3차 협력업체군에 속해 있으며, 단순 저부가가치 부품 또는 부분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³⁾
- 국영기업(SOEs)과 몇몇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베트남 민간 기업은 규모가 작아 내수 지향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생산성 제고에 필요한 규모, 기술, 경쟁 압력이 부족⁴⁾

■ 2026년 4월 승인된 ‘핵심산업법(Law on Key Industries, Resolution No. 82/NQ-CP)’은 베트남이 단순조립기지에서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자 산업 정책의 이정표를 바꾸는 법안⁵⁾

- 단순한 조립·가공 단계를 넘어 연구, 설계, 첨단 제조로의 전환을 통해 베트남의 지식과 기술력을 강화하고 산업 현대화에 기반한 자립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명시
- 핵심산업법의 주요 골자는 지원 산업(Supporting Industry)의 육성과 현지화(Localization)의 전략적 재정립
 - 과거에는 단순한 부품 국산화 비율에 집중했다면, 새 법안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산지 규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베트남 기업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더 깊숙이 참여하도록 유도
- FDI 유치 정책도 ‘양적 수용’에서 ‘기술 이전 중심의 선택적 유치’로 전환
 - 자본 유입 그 자체보다는 기술 이전의 규모, 현지 공급망과의 연결성, R&D 투자 여부를 엄격히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차등 제공함으로써 국내 민간 기업들이 경제의 진정한 주체가 되도록 설계

다. 디지털 기술 산업법(DTI Law)과 인공지능(AI) 국가 전략

■ 베트남은 디지털 전환을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국가의 명운을 건 전략적 돌파구로 삼기 위해 ‘디지털 기술 산업법(Law on Digital Technology Industry, DTI Law)’을 2025년 6월 제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⁶⁾

- 법안은 과학기술과 혁신을 바탕으로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디지털 기술 산업의 육성과 규제를 위해 베트남이 처음으로 도입한 포괄적인 법적 틀
 - 특히 가상 자산, 암호 자산 등 디지털 자산을 법률을 통해 공식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핀테크 및 블록체인 산업의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
- DTI법을 통해 2035년까지 디지털 기술 기업 15만 개를 설립하고, 디지털 경제 비중을 2030년까지 GDP의 최소 30%, 2045년까지 5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⁷⁾

3) World Bank Group(2017), “Vietnam: Enhancing Enterprise Competitiveness and SME Linkages: Lessons from International and National Experience,” Washington, D.C.: World Bank.

4) World Bank(2020), “Vibrant Vietnam: Forging the Foundation of a High-Income Economy,” p. 31, Washington, D.C.: World Bank.

5) Vietnam.VN, “Government Resolution on Industry: Creating a New Growth Foundation”, <https://www.vietnam.vn/en/nghi-quyet-cua-chinh-phu-ve-cong-nghiep-kien-tao-nen-tang-tang-truong-moi>(검색일: 2026. 4. 15.).

6) Allen&Gledhill, “Vietnam establishes digital technology framework and launches crypto asset market pilot program,” <https://www.allenandgledhill.com/perspectives/articles/31332/vnkh-vietnam-establishes-digital-technology-framework-and-launches-crypto-asset-market-pilot-program>(검색일: 2026. 4. 15.).

7) Hoai Truong(2025), “Vietnam’s First Legal Framework for AI and Digital Assets, NO&T Asia Legal ReviewNo.105(September, 2025),” <https://www.nagashima.com/en/publications/publication20250929-1/>(검색일: 2026. 4. 16.).

- 디지털 기술을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삼아, 해당 부문 성장률을 국가 GDP 성장률의 2~3배 수준으로 견인
- 혁신과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베트남을 세계 상위 30개국 안에 진입시키는 것이 목표
- DTI법에 따라 혁신 스타트업은 법인 소득세 감면, 토지 임대료 인하, 우수 디지털 전문가에 대한 개인 소득세 면제, 외국인 전문가에 대한 5년 비자 발급, 정부조달 확대 등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음.⁸⁾
 - [법인세 혜택] 6조 동(VND) 이상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최장 37년 동안 5%의 저율 과세 적용, 초기 6년간 면세 후 13년간 50% 감면 혜택
 - [연구개발 비용 공제] 기업의 R&D 비용을 실제 지출액의 최대 200%까지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하여 기술 투자 유도
 - [개인 소득세 면제] 반도체 칩 설계나 AI 시스템 개발에 종사하는 고숙련 전문가들은 5년간 개인 소득세 전액 면제
 - [정부 우선 구매] 정부조달 프로젝트의 경우 'Make in Vietnam'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법적으로 보장

라. 인적 자원 육성 및 반도체·AI 허브 구축

- 2026년 1월 개최된 베트남 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14th National Party Congress)에서 확정된 '사회경제개발계획 2026-2030'을 통해 반도체 설계·AI·첨단 제조 허브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베트남 경제 구조 개편의 성공 여부는 결국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사람'에 달려 있음.
 - 제14차 당대회는 인적 자원 개발을 최우선 국가 전략으로 격상하고, 2030년까지 5만 명 이상의 반도체 엔지니어를 양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
 - 이를 위해 베트남 정부는 '대학 내 기업(Enterprise inside University)'이라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실험
 - 하노이와 호찌민의 주요 국립대학 부지 내에 글로벌 기업의 R&D 센터와 시범 생산라인을 유치하여 학생들이 학습과 동시에 실제 생산라인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이론과 실무 역량 간 간극을 해소
- 목표 달성을 위해 반도체 설계 역량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30년까지의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 및 2050년 비전'을 수립하고 인적 자원 개발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격상⁹⁾
 - 2030년까지 최소 100개의 설계 회사를 설립하여 설계 역량을 확충하고 최소 10개의 조립, 테스트, 및 패키징(APT) 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를 상실할 위험이 있는 기존 노동자들을 위해 '평생교육'과 '재교육' 시스템을 가동하여 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
 - 이는 베트남이 더 이상 저렴한 인건비가 아닌, 숙련된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겠다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상징

8) Ibid.

9) 베트남 총리령 Decision No. 1018/QĐ-TTg(2024년 9월 21일 승인).

마. 지속가능한 성장과 녹색 전환

- 베트남은 지속가능성을 경제성장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2050년 넷제로(Net Zero)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추진 중
 - 2026년 3월 운영을 시작한 베트남 최초의 탄소배출권거래소(ETS)는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글로벌 보호무역 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
 -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PDP8)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LNG와 원자력 발전을 신규 도입하여 에너지 믹스를 다변화¹⁰⁾
 - 2030년 총설비용량 목표를 기존 150GW에서 183~236GW로 상향하고, 태양광 발전 목표를 25GW에서 46~73GW로 확대
 - 풍력 발전도 육상·해상 합산 30~42GW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LNG 발전소 15개를 준공하는 한편 2031년부터는 4~6.4GW 원자력 발전소를 신규 도입할 계획
 - 에너지 수급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첨단 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적 포석

3. 한국-베트남 협력에 주는 시사점

- 결론적으로, 제14차 당대회 이후 베트남이 지향하는 ‘민족도약의 시대(Kỷ nguyên vươn mình của dân tộc)’로의 진입 선포는, 한국이 베트남을 단순한 ‘포스트 차이나’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인식하고 가치를 다시 부여하게 함.
 - 베트남의 제도 개혁, 산업 고도화, 인적 자원 혁신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이를 한국의 기술력 및 인력 수요와 결합하는 치밀한 대응이 필요
 - 베트남의 성장이 곧 한국의 기회가 되도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5년의 양국 관계에서 핵심 과제가 될 전망

가. 한국의 인력난 해소와 베트남 기술 인재의 전략적 활용

- 2030년까지 연평균 10%라는 파격적인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베트남 정부가 기술 이전과 첨단 기술인재 양성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한국기업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
 - 베트남 정부가 기술 이전과 인재 양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의 사례와 같이 현지 대학

10) 유상철(2025), 「녹색전환 중인 베트남경제...우리가 주목할 세 가지 기회는?」, 『나라경제』, 9월호, https://eiec.kdi.re.kr/publish/columnView.do?cidx=15309&sel_year=2025&sel_month=09.

과 연계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SIC, V-STT, STP 등)을 운영하고 R&D 센터를 강화하는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

- SIC를 통해 2019년부터 12,000명 이상의 청소년에게 AI, IoT 등 첨단 IT 교육 실시
 - V-STT를 통해서도 하노이 국립대의 석사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반도체 설계, 패키징, 테스트 등 실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을 제공하여 베트남이 목표로 하는 반도체 인력 5만 명 양성에 기여
 - STP(Samsung Talent Program)를 통해 삼성전자는 하노이과학기술대학교와 동남아 최대 R&D 센터인 하노이R&D 센터와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을 집중 육성
- 삼성전자의 인력 개발 활동은 베트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삼성전자의 공급망 품질 안정화에도 기여
- 실제로 삼성전자의 로컬협력사 수가 2014년 약 25개사에서 2022년 257개사로 증가한 것은 상생형 성장 모델의 대표 사례¹¹⁾
 - 중장기적으로 현지 숙련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현지 생태계에 숙련 인력을 공급할 수 있고, 로컬 기업의 기술 상승으로 품질 안정성 확보가 가능해지며, 국민기업 이미지 확보를 통해 베트남 정부로부터 신뢰자산을 축적함으로써 행정 리스크 완화에도 도움이 됨.
 - 한국식 생산 표준을 확산시킴으로써 한국의 중간재 및 자본재가 더욱 쉽게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부수적 효과의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기여는 삼성전자뿐 아니라 베트남 로컬 기업, 한국계 협력사도 함께 성장하는 공진화(Co-evolution) 과정을 통해 한국기업의 전략적 주도권 유지에도 보탬이 됨.

■ 한편 베트남의 인력 양성 요구는 한국의 첨단 기술 부문 인력난 해소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기회로 활용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

- 한국이 직면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첨단 산업 분야 기술 인력이 부족해질 전망
 - 고용노동부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12,800명, 클라우드 18,800명의 신규 인력 부족을 전망¹²⁾
- 베트남의 인재 양성 열기를 활용하여 현지에서 첨단 기술 인력 및 테크니션을 양성하고 한국으로 송출할 수 있다면 한국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임.
 - 베트남의 하노이 국립대학교나 과학기술대학교와 연결하여 현지에서 첨단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한국의 ODA를 활용해 가동
 - 한국 중견·중소기업 대상 직무수요조사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베트남 인력과 한국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
 - 베트남의 '대학 내 기업' 모델과 연결하여 운용함으로써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양성
 - 양성된 인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베트남 현지 기업 또는 한국 취업 선택권 부여
- 베트남 인력 양성은 첨단 기술 분야의 숙련인력을 확보하여 양국의 기술 경쟁력을 동시에 제고하고 생산 표준화를 통해 무역 확대를 촉진하는 윈-윈 전략

11) VIR(2023. 6. 19.), "Samsung Vietnam: Where dreams come true," <https://vir.com.vn/samsung-vietnam-where-dreams-come-true-102739.html>(검색일: 2026. 4. 17.).

12) 고용노동부(2023. 8. 31.), 「27년까지 인공지능(AI) 12,800명, 클라우드 18,800명 신규인력 부족 전망」,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458(검색일: 2026. 3. 13.).

나. 에너지 안보 및 탄소 시장 협력 기회 포착

- 중동의 불안정성과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은 베트남과 한국 모두에게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을 각인
- 베트남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수입구조의 취약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한국과 공감할 수 있는 파트너
 - 베트남의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PDP8)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스마트 그리드 확충계획은 한국의 ESS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 전력망 기술이 진출할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을 제공
 - 탄소배출권거래소 개설과 관련하여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국제 감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한국기업들은 베트남의 녹색 전환에 기여하고 확보된 탄소배출권을 자사 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가능
 -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산업단지를 전력원 인근에 개발하여 한국기업을 유치하고, 탄소배출권 일부는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국제감축사업 대상으로 활용 **KIEP**